

조선데스크

안도현의 '여성 대통령론'



김태훈
국제부 차장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인 안도현씨가 얼마 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불가론'을 폈다. 안씨가 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고 있는 만큼 박 후보를 공격하는 것을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 다만 여성 대통령 불가론을 펴는 그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안씨는 "박 후보는 '공주' 여서 여성을 대표할 수 없다"며 "차라리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남편 수발, 자식 수발하면서 고생하며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모르지만"이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여자가 가족을 위해 고생한 것이 대통령이 되는 조건이라면 우리나라엔 여성 대통령 후보자만 1000만명은 될 것이다. 독신 여성이나 결혼했다라도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은 여성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얘기도 된다. 대통령으로서 지도자의 자질과 아내-어머니의 사랑은 다른 차원의 가치라는 점을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안씨가 여성 대통령으로서 박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고 싶다면 아내-엄마 노릇을 해봤느냐고 따지기보다는 그에게 여성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리더십이 있는지, 이를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상충하는 국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야 했다. 얼마 전 한국 남녀의 임금 격차 OECD 회원국 중 최대로 벌어져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는 박 후보에게 이런 임금 격차를 줄일 방안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야 했다.

그가 박 후보에게 따져 물어야 할 것은 또 있다. 최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성들이 결혼과 임신을 늦추다 보니 노산(老産)으로 산모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인구 감소로 산부인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이 때문에 도움을 제 때 받지 못한 고령(高齡) 산모의 사망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다 노산 사망 문제까지 겹쳐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꺼져가는 시급한 문제의 해결책은 왜 묻지 않느냐.

요즘 유럽이나 남미에서는 여성이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여성이 집권 과정에서 밟고 가는 족 뒷바라지 잘했다며 표를 달라고 한 경우는 없었다. 자신의 머리를 손질하던 남자 미용사와 동거하는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에겐 자식이 없다. 그가 지난 10월 정부 재정부 적자 완화를 위해 출산수당 삭감안을 내놓자 야당인 자유당의 토니 애벗 대표는 "출산 경험이 있었다면 이런 정책을 내놓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성(性)차별주의자로 몰렸다. 이 발언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조짐마저 보이자 애벗은 "총리가 사과를 요구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용서를 구했다. 애벗 대표의 말은 정책 이견(異見)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도 비난을 샀다.

안도현 시인뿐 아니라 정치에 뜻을 둔 한국 남자들은 바깥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사정에 귀 막고 여자를 기존 성(性) 역할에 가두려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朝鮮日報 The Chosunilbo 단기 4345년
우100-756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1번지 전화(안내) 02)724-5114
독자서비스센터 전화 1577-8685 FAX 02)724-6299 홈페이지 morningplus.chosun.com
광고신청-안내 전화 02)724-5838, 6666 FAX 02)724-5879 홈페이지 ad.chosun.com
구독-배달안내 전화 080-900-0077(전국 공용)
사장 方相勳 발행인-인제인 邊龍植 주필-편집인 姜天錫 편집국장 楊相勳
구독료: 한달 1만5000원, 1부 8000원
1964년 1월 1일 등록번호 가-9호-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해외시론



야나기마치 이사오
日 게이오대 교수·경영학

일본 정치 고질병인 '세습 금지' 이번 선거 쟁점 중 하나 떠올라 한국에선 '경영자 세습'이 논란 능력 없는 세습은 모두가 불행 엄격한 육성 시스템 거친다면 '세습 경영자'가 더 유능하기도

한국 재벌, 세습이 아니라 검증이 문제다

12월 들어 일본이나 한국이나 완전히 선거 분위기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세습 정치인이 과거에도 많았지만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자민당과 차별화하기 위해 경쟁화하고 있다. 자민당 중의원(하원)의 40%가 세습 의원이라는 점에 착안, 민주당이 이를 자민당 공격 포인트로 삼은 것이다. 민주당은 2세 정치인에게는 공천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부에서는 정치 자금 관련 법에 정치 세습 금지 조항을 집어넣자고 제안하는 등 일본 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선거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선거구를 택하면 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 자민당은 정치인 2세대, 3세대 능력이 검증된 인재까지 출마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치 세습 논쟁에 밀려 점차 중요한 국회의원의 능력에 대한 논의는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세습 정치자를 경쟁화하는 것도 갈팡질팡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외면을 받아 지지율이 급락, 이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세습 반대를 외치는 민주당은 능력 있는 정치인의 부재(不在)에 시달리고 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유능한 인재가 정치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인 육성 시스템의 확보이다.

세습 시비에 대한 논의는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

니다. 기업의 후계자 육성 문제는 세계 모든 기업의 공통 과제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재벌 문제의 핵심이 '경영자 세습'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쟁점이 된 경제 민주화 논쟁도 이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한국 재벌의 최고 경영자(CEO)는 창업자의 자손이 승계하고 있다. '완전히'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예외는 없다. 현재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대부분 창업자의 아들 세대(2세)에서 손자(3세) 세대로 이행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기업에만 세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유명 기업 중에도 세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 기업이 엄격한 CEO 능력 육성 시스템과 경쟁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실력도 능력도 없이 단순히 창업자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최고 경영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본인에게도, 조직에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엄격한 능력 육성 시스템을 통해 단련되고 경쟁을 통해 능력 검증을 거친다면 창업자 문 출신의 최고 경영자가 문제 될 것은 없다.

창업 가문 출신의 경영자는 전문 경영인이 갖지 못한 장점도 있다. 셀러리엔 출신 전문 경영인은 단기 실적에 연연해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놓치기 쉽다. 필요할 때 선제적인 투자나 구조조정을 하기도 어렵다. 한때 세계를 리드하던 일본의 전자업체가 전문 경영인 체제의 단점이 드러나면서 실적 악화에 고심하고 있다. 세습이나 아니냐보다 기업의 생존을 본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뛰어난 경영자, 능력 있는 경영자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성공 사례가 일본의 간장 업체 기코만이다. 시골에서 가족 기업으로 출발, 지금은 100여개 국가에서 3조7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세계적인 식품 기업이다. 1917년 기코만의 전신(前身)인 노다 간장은 8개 집안에 의해 창업됐다. 당시 과당 경쟁으로 공멸(共滅)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회사의 공동 설립으로 이어졌다. 8개 집안은 경영자 선정 문제에 고심했다. 각 집안의 회사 임사자는 남자 1명으로 제한했다. 또 각 집안은 호선(互選)에 의해 수석상무를 결정했다. 수석상무는 사장 밑에서 CEO 후계자 수업을 받은 후 차기 사장으로 취임하는 방식으로 후계자 육성 시스템을 만들었다. 각 집안에서 입사한 사람들은 집안의 명예를 걸고 수석상무를 목표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미리 명확한 규칙을 정하고 규칙에 준거해 공정한 판정을 내리고, 그것을 모두가 수용함으로써 창업자 집안들 간에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다. 특정 개인이 인사권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경영자를 육성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에 따르는 것이다.

기코만은 최고 경영자 선출에 세습과 경쟁 원리를 결합,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 한국에서 창업자의 손자(3세) 세대에는 엄격한 능력 육성 시스템을 거쳐 능력이 증명된 인재가 기업을 이끌어야 한다. 어쩌면 한국 대기업의 운명, 더 나아가 한국 경제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萬物相

귀농(歸農)

공기업 간부 S씨는 2년 뒤 은퇴하면 가서 살려고 덕유산 아래에 땅을 사했다. 한 달 전에 만났더니 그는 자신이 백살까지 사는 살 거러면서 '노인에게 맞는 전원생활 집' 설계에 푹 빠져 있었다. 엔지니어답게 관공사에서 남는 자재 싸게 사는 법도 연구해왔고 목공 일도 익혀 왔다. 비료·농약 안 쓰는 자연농법으로 사과 재배를 성공시키겠다고 들뜬 표정이었다. 준비 과정 자체가 큰 즐거움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2007년 서울대 교수 생활을 그만두고 자기가 설계해 직접 지은 시골집에서 산다는 K씨를 찾아간 일이 있다. 풍광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집이었다.



뜻밖에 그는 동네 사람들 배척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다. 지하수를 파면 "마을 지하수 다 말라버린다"고 시비 걸었다. 포클레인으로 동네 일 거저 해주겠다고 나섰더니 "그럼 여기 사람 일거리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며칠 전 K씨가 연락해와 근황을 물었더니 이제 적응해 산다고 했다. 사투리도 배우고 아이들 공부방 같은 것도 만들어주자 마음을 여는 이웃이 꽤 생겼다는 것이다. 몇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와도 굽히지 않고 맞대응하곤 했더니 더 귀찮게 하지는 않더라는 것이다. 요즘엔 귀농하겠다는 농사짓는 법

에 앞서 미용 기술, 보일러 기술부터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다. 시골에 필요한 기술을 익혀 갖고 들어가 봉사하면서 현지 주민의 거부감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생각에서다. ▶작년 귀농 인구가 1만7500명이라고 한다. 2010년(5405가구)보다 86%나 늘었다. 귀농인 평균 연령이 52.4세인 것을 보면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대거 시골로 가고 있다는 말이다. 그중 1인 가구가 58%나 된다. 초기 정착 위험 때문에 가장(家長) 먼저 귀농해 정착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개중엔 남편은 시골, 아내는 도시에 살면서 두 집 살림하는 경우도 있다. ▶농촌에 뿌리 내리려면 이웃과의 친교(親交)만큼이나 고독과의 친교도 중요하다. 19세기 호숫가에 살면서 무소유 삶을 실천했던 미국 사상이 헨리

D 소로는 숲에 들어가 뭘 하겠다는 거냐는 물음에 "계절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할 일은 충분하지 않겠소"라고 했다. 시골생활 6년째인 어느 인사는 블로그에 "변잡한 대도시에서 살면서도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소"고 썼다. '군중 속 고독'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지만 '자연 속 고독'은 때로 마음이 충일(充溢)한 경지에 이르게 해준다는 것이다. 한삼희 논설위원

가슴으로 읽는 시

기러기의 시 - 洛東江·12

강 마을
긴 긴 겨울밤에
얼어붙은 강물 위로 날아가던
저 기러기들의 울음소리는
희다흰 달빛의 시였다.

싸늘한 삭풍 속에 북쪽 하늘로
끼르끼르, 끼르끼르, 끼르끼르.....
시웃 자를 그리며 서럽게 날아가던
스무 마리 눈물의 시.

조금 뒤쳐져 힘없이 끼웃끼웃
따라가던 한두 마리는
한 줄기 고드름 같은
차갑고도 맑은
시였다.

- 이달희(1948~)



우리 말의 절묘함이 기러기라는 이름에는 있다. 그 울음소리는 끼르끼르이고 길게 늘어져서 나니 결국 기러기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게다가 '기'자로 편대를 이루어 날아가지 않던가. 기러기지만 '그러기'라고 하면 또 어땠겠나. 미소가 절로 나오는 궁정의 발음이다.

숲의 모든 나뭇가지가 하늘을 얹어놓으면 그때 맞춰 기러기는 언 하늘 찬 공기를 깨치며 겨울밤을 떠메고 온다.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나 날아온 그 나라도 우리나라여야만 할 것 같다. 얼 지어 날아가는 모습에서는 질서와 조화를 깨지 않고 하나의 낙오도 없이 무리를 이끄는 참 공동체의 문장(紋章)을 본다. 때로 잠 못들어 뒤적이는 자의 아름다운 벗이 되기도 하니 '눈물의 시(詩)'의 낭송자요, 뒤를 따르는 외기러기의 모습은 '차고도 맑은 시'의 원형이 아닌가. 장석남·시인·한양여대 교수

사교육은 나라의 공적인가?

- 사교육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보면,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무시한 "일몰 후 사교육금지", 학교 밖 교육기관을 도외시한 "온종일 학교운영" 등, 사교육자들에게 편중된 물리적인 압박이고 사교육비 경감에만 초점을 맞춘 졸속 공약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과연 헌법정신에 맞는 것인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 제도권 사교육은 죽이고 불법 고액과외만 양산하는 정책이다.
- 교육이 학교 담장을 넘어가면 왜 정상적인 교육이 아닌 것으로 보는가. 우리나라 사교육 참여율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고 사교육률 높은 나라의 경제성장 속도도 빠른 것을 보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당국자들이 사교육을 때려잡아야 할 공적으로 몰아가는 현재의 분위기는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교습소는 보충학습과 심화학습으로 공교육을 보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고, 국격을 높인 밑바탕에 사교육의 도움이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 교습소는 9인 이하의 학생을 소수정예로 설립자가 직접 가르치는 소규모 사교육기관이다. 우리 교습소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학원법상 학생 1인당 시설규모도 3배 이상이고, 소수정예로 지도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교습료 기준을 감수하면서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 교습소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교습을 하는 맞춤형 고품질교육이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국가 인재개발의 한 축으로 자임한다. 대권주자는 바우처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학부모들의 부담도 줄이고, 더욱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